

# 전북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 대응

###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4차 전략회의' 개최... 정주여건·산업 연계 기반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실국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4차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유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산업 연계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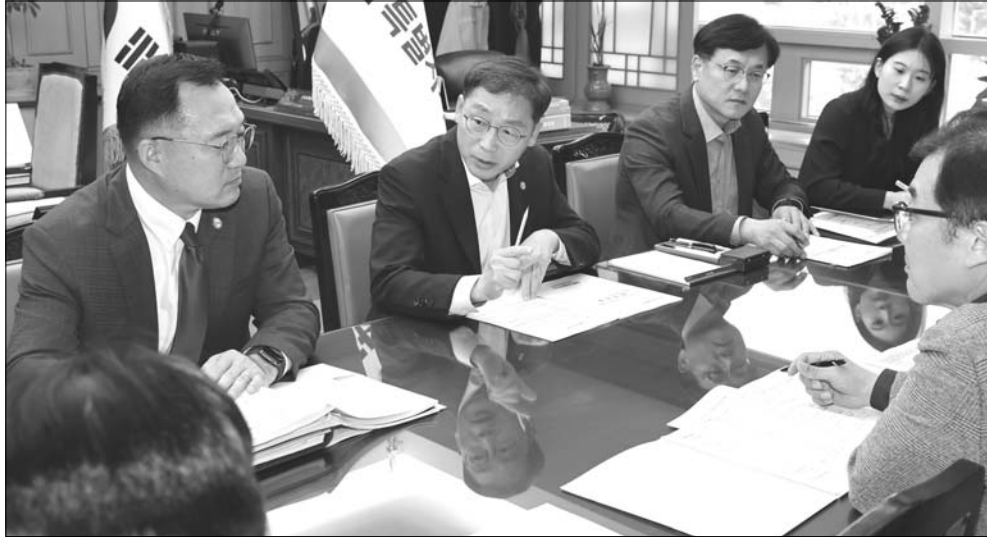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국 간 협업을 통한 통합 대응체계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아울러 금융·농생명·첨단산업 등 전북의 핵심 산업과 연계한 기능 중심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도민 공감대 확산과 범도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전 실국 일체 출장을 통해 유치 희망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 간담회 대응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유치 활동을 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고 기관 측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이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제4차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동향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전략회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대응 방향을 정비해 왔다.

특히 이전 대상 기관들은 주거·교육·보육이 결합된 정주환경과 산업 연계 기반 교통 접근성 등 실질적인 이전 여건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현상 수요를 반영해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5월부터는 도청 지휘부가 주요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대응에 나서는 등 유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실질적인 이전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그간 축적한 현장 대응 경험과 기관별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전북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내란 의혹 기소 시 정계 은퇴” 초강수

### 김관영 지사, 무소속 출마 여부에 “7일 공식 입장 내놓을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경우 정계에서 물러나겠다는 초강수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7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검에서 기소가 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해서라기보다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며 "그만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진행된 특검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이뤄진 상황"이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신속한 결론이 나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고민이 깊은 사람"이라

며 "정치적 소신과 현실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7일에는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 출마 준비 중 지지를 1위를 달리다가 지난 해 11월 30일 청년단원과의 만찬 후 대리기사비를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1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감찰 후 12시간만에 전격 제명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리기사 비용 명목 현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오만호 기자

### 전북선관위 “6·3 지방선거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해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청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신청을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거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선거인은 인터넷·모바일(apply.ncg.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우편으로 28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은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 “완주 대도약 위한 원탁회의 열자” | 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장

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 운동본부장이 완주군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원탁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국 전 본부장은 지난 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대도약과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위기 타개 방안으로 '완주 대도약을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안의 배경에 대해 "당을 초월한 정책연대를 통해 완주군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소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지방자



치를 찾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 전 본부장은 유희태 후보를 겨냥해 "완주-전주 통합 문제에 대한 군민 우려와 부동산 투기 의혹 사법 리스크 등으로 선거 이후에도 지역 사회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군정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군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군민 주권형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경선 과정에서 정책연대로 뜻을 모았던 이대순 서남용 임상규 인사들과 박성일 전 완주군수, 송지용 전 전북도오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완주군의회를 대표하는 유익의 의장 역시 반드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한 자신의 변화도 언급했다. 국 전 본부장은 "그동안 '선당후사(先黨後死)'의 신념으로 당을 우선해 왔지만, 이제는 '선민후黨(先民後黨)'의 가치 아래 군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완주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기자·완주=염재복기자

### 전북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등 집중 예방 단속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군소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북선관위는 지방자

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청을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입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 도, '어린이날 대축제' 성황리 개최

### 6개 테마·67개 체험존... 놀이·공연·교육 프로그램 마련

자치도는 5일 어린이날대축제행사에서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어린이국악관현악단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의 기념사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어린이들과 함께한 기념 퍼포먼스로 본행사가 시작됐다. 특히 어린이 4명이 직접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하는 순서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어른들과 함께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

을 가졌다.

올해 대축제는 △즐거움(합동컵쌓기 놀이, 탁구공 빙고 게임관 놀이, 가상 스포츠 대회 등) △꿈꾸기(터봇 미로탈출 대작전, 로봇 해양구조대, 머지큐브로 만나는 증강현실 등) △체험하기(체험관 내 상설체험시설) △아웃GO(카디오페로, 얼굴공방 등) △알아보GO(도내 유관기관 프로그램) △공감GO(뮤지컬 갈라쇼, 인형극, 미술공연 등) 등 6개 테마존, 총 67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만호 기자

# 소규모 농경지 정비 국비 지원

### 농어촌정비법 개정... 수혜면적 30만㎡ 이상으로 완화

### 도, 예산확보 선제 대응·안정적 농업 기반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전북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29일과 30일은 위장전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후 전 실국 일체 출장을 통해 유치 희망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 간담회 대응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유치 활동을 병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수로, 배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소규모 농경지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수혜면적 50만㎡ 미만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방비 285억 원을 투입해 25개 지구, 516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3년에는 수혜면적 50만㎡ 이상 농경지를 대상으로 국비 600억 원을 투입해 56개 지구, 7,484만㎡ 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도, 고흥사랑기부자에 '추가 혜택' 쏟아

### 가정의 달 맞아... 후기 작성 선착순 200명에 3만원 상당 고품품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흥사랑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답례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후기 작성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자가 답례품 이용 후기를 남기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단순 기부를 넘어 경험 기반 정보 공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방법은 5월 1일부터 18일까지 고흥사랑기부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도청)를 선택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답례품을 주문하고, 5월 28일까지 수령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흥사랑기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답례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후기 작성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부자가 답례품 이용 후기를 남기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단순 기부를 넘어 경험 기반 정보 공유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 방법은 5월 1일부터 18일까지 고흥사랑기부금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도청)를 선택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뒤 답례품을 주문하고, 5월 28일까지 수령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소지를 옮긴 경우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